



IMF 신자유주의의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밀어닥치고 있다. 물가는 폭등하고 하루 폭가가 넘는 기업이 쓰러지고 수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가들은 외세의 요구에 기대어 IMF 통치 이전부터 노래했던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현위기 상황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짚어 보았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국 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든 한국 사회는 분명히 바닥에 흔들리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경제에서 정치 사회 그리고 국민의 생활 구석 구석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일면서, 고통스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이 당하는 어려움

은 유플나게 두드러져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자에 일터에서 거리로 내몰려 방황하고 있고 아무런 등의 없이 임금이 깎이는가 하면, 법으로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또 있다. 노동시간이 기업의 방침에 따라 연장되고 노조활동이 억눌리며,

단체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산업현장이 살벌해 지는가 하면, 생활형편마저 쭈그러들고 있다. 이런 상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나쁘게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는 터여서 기운 차리기에 더욱 벅차다.

오늘의 위기는 어디서 온 것인가

노동자계급이 어려운 지경에 놓일수록 노동 운동의 책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어찌보면 노동운동의 발전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초기의 극심한 차취와 억압 속에서, 독점자본 형성기에는

거대 자본과 맞서 투쟁대열을 굳게 하면서, 전쟁과 과시즘 체제 아래서는 혁명의 깃발을 치켜들기도 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사회세력화와 정치세력화를 밀고 나가면서 반동의 벽을 허물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의 위기 상황도 노동운동의 전진을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낙관주의는 노동운동 발전에서 요구되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정황이 만만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 상황이 노동운동에도 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

하기 어렵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캐고 장기 전략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사회가 겪는 위기 상황은 자체의 구조 면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IMF 관리 체계에 들면서 축발된 면이 크다. IMF가 한국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요구한 이행조건은 실로 위협에 찬 것이었다.

IMF의 요구조건은 크게 보면 경제안정 프로그램(긴축 정책)과 구조 조정 프로그램(자유화 정책)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 재정 긴축과 통화 증가율 억제, 부실금융기관 정리, 무역 자유화와 자본 자유화, 기업지배구조 조정, 노동시장 유연

노동운동은 산업혁명 초기의 극심한

차취와 억압 속에서 전쟁과
과시즘 체제 아래서는 혁명의 깃발을
치켜들기도 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사회세력화와 정치세력화를 밀고 나가면서
반동의 벽을 허물어 오늘에 이르렀다.

화 등이다.

이런 조건들이 관철되면, 관리체계가 끝난다 할지라도, 한국 자본주의는 근본 구조 면에서 큰 성격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상되는 것은 국제독점 자본의 직접 지배 강화이다. '지구촌화' 시대에서 자본의 국적은 문제될 것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초국적 자본의 경우에도 국적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와 자본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와 경제 이윤의 유출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경제주권의 상

실이나 정치의 자주성 약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IMF 구제금융을 겪은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경험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 이른 원인부터 따져 보자. 여기서는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 자본주의의 출발 배경이나 2차대전 종료 이후의 미군정기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을 듯 하다.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은 대외지향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한국 경제의 발전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으로 생산한 상품을 나라 밖으로 내다 파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한국경제는 국제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면서 종속이 심화되었다.

이번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주어진 갖가지 특혜와 지원을 통해 재벌이라는 한국 특유의 독점자본이 빠르게 형성되어 노동자계급에 대한 수탈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비독점 부문에 대한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이런 재벌 지배구조는 대외종속적 경제구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한편 경제개발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역대 정권이 군사화 쇼 집단에 의해 지배되어 온 터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구조가 고착되다시피 유지되었다. 이런 종속과 독점 구조에 기본 바탕을 둔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배

경으로 한 국제독점자본의 경쟁 압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화와 개방화를 앞세운 자유화 경향이 확대되면서 한국자본주의가 파탄에 가까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국가권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도 높게 펴게 될 것이고, 자본 쪽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전면적으로 밀고 나가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노동운동의 전략 목표 확고히 해야

지금 눈앞에 다가선 경제위기는 이렇듯 구조면에서 비롯되었고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과 자본쪽의 공세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도 힘에 벅찰 정도로 무거울 것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목표를 확고히 설정하고, 전술 운용은 원칙을 고수하되 유연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략 목표를 '한국자본주의의 근본적 개혁'에 두고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구조나 위기의 본질에 비추어, 민주노총의 전략 목표 설정은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자본주의의 근본적 개혁은 아마도 종속적 독점적 자본축적 구조의 지양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배치되는 국내외 독점자본과 국가



현 상황에서 산별체계로의 조직형태 전환과 노동전선의 통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권력의 자본축적 구조 및 권력행사를 민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이익을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민주주의는 국제독점자본은 물론 국내독점자본을 막론하고 독점자본 중심의 국가 정책과 무제한적인 축적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반독점 민주주의 성격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경제민주주의 목표는 정치 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지향한다. 그것은 대외 종속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축적 구조를 개혁적이고 자립적인 축적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시기에 제기되는 경제민주주의 과제는 경제정책의 민주적 개혁, 재벌해체와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기업과 국 민기업 확대, 경제평등, 정책과 제도 개혁, 노동자와 민중의 정책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 확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리 보장

등이 될 것이다.

원칙에 충실히되 전술은 유연해야

노동운동이 이런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길은 멀고도 더할 데 없이 혼난할 수 있다. 노동운동 발전의 가기는리를 반영하듯 승리와 패배, 고양과 침체, 비약과 정체의 과정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을 거쳐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전략 목표는 확고해야 하고, 전술 운용은 전략 목표에 종속시키되 유연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전술을 운용하는데 있어 그 원칙은 견지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현시기 투쟁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고, 전술은 어떤 방향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인가.

투쟁 목표는 노동자계급의 현실 요구에

바탕을 두고 정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현시기 투쟁 목표는 재벌체제 철폐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고용보장과 실업대책 강구, '정경유착'과 부패구조 척결, 정책과 제도의 전면 개혁(노동관계, 물가, 세세, 재정, 사회보험체계, 교육, 환경 등), 노동기본권의 완전 보장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 정책 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가와 기업경영에 대한 폭넓은 참여 등이 될 것이다.

IMF 관리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투쟁목표는 전략 목표 실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IMF 체제가 어느정도 종료된다 하더라도,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과 독점구조가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철저히 심화되고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쟁은 완강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투쟁체제의 정비 강화이다. 이것은 종속체제와 독점구조의 극복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투쟁체제를 강고히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중앙조직 차원에서는 투쟁본부 또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투쟁목표와 과제, 투쟁방침을 올바르게 설정함과 동시에 투쟁지도력을 민활하고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산업별 조직 차원에서는 중앙조직의 결정과 방침에 따라 투쟁지침을 마련하여 산하 조직의 상태와 역량에 맞게 다양한 투쟁방법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을 추진하는 일이다. 단위노조 차원에서는 투쟁위원회나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민주화를 목표로 노동 대중의 요구에 바탕을 둔 협동투쟁 또는 대중투쟁을 신축성있게 조직해야 할 것이다. 협동투쟁이 임금단협투쟁이나 일상투쟁과 결합될 때 큰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지역의 주민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각급 조직 차원의 투쟁체제는 체계성과 유기적인 통일성을 확고히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투쟁조직의 체계와 통일이 견지되지 않을 경우, 투쟁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정세가 엄중한 만큼 투쟁의 온바른 전술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면서도 곤란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듯하다. 이 때 강조되는 것은 다름아닌 기본 원칙이다.

먼저 정세변화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파악이 중요하다. IMF 체제를 부른 원인과 배경, 이행조건이 가져올 상황과 전망, 지배권력과 자본의 정책과 제도의 개편 틀과 공세방향 및 지배방식의 변화, 상대방과 우리쪽의 역량관계, 국민여론의 동향 등에 대한 바른 판단이 투쟁전술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정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며,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상호간의 역관계에 대한 정확한

과아이 승패를 관가름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음으로 투쟁의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낙 정세가 급박하게 변하고 산업이나 부문 또는 사업장마다 변화 양상이 다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상태도 다양한 형편이어서, 투쟁을 조직하고 배치하는 문제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투쟁 지도부는 투쟁의 각 단계와 국면에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투쟁 전술을 운용할 때, 상호간의 역관계나 정세변화를 무시하고 고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형식적인 투쟁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옳바른 전술지도가 될 수 없다. 전술은 다양하면서도 유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세가 불리하다고 해서 투쟁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옳바른 전술지도가 될 수 없지만, '원칙' 만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투쟁을 벌이는 것도 돌이키기 어려운 폐해를 자초할 위험이 있다.

노동자계급의 무한한 투쟁역량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때로는 후퇴와 타협까지도 감내하면서 전략목표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전술의 결정과 실행에서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민주적인 방식

이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술운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장투쟁과 정책제도 개선 투쟁을 통일하는 것이다. 현장 안의 임금 요구에서 분배제도 개선 요구로, 노동환경 개선 투쟁에서 의료개혁 또는 환경보호 투쟁으로, 해고방지 투쟁에서 고용보장제도 확

보 투쟁으로, 복지후생 확충 요구에서 사회보장제 개혁 요구로, 직업훈련 문제에서 교육개혁 문제로, 작업장 민주화 투쟁에서 산업민주화 또는 정치민주화 투쟁으로, 이론바 '공장에서 사회로' 투쟁의 통일과 발전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개선 투쟁에서는 명확한

요구와 설득력있는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 개혁을 위한 계기 만들어야

현시점에서 볼 때, 노동운동은 엄청난 도전에 부닥쳐 있다. 노동운동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그 도 그럴 것이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과 정세의 급격한 변화 자체가 하나의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띤 자본과 권력의 통제와 지배 강화, 그

전술은 다양하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또 정세가 불리하다고 해서 투쟁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옳바른 전술지도가

될 수 있지만, '원칙' 만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투쟁을 벌이는 것도 돌이키기

어려운 폐해를 자초할 위험이 있다.

리고 주변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절박해지고 다양해지는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엄청난 도전으로 밀려드는 현실이다.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노동운동은 자기 개혁을 강요받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시대의 간곡한 요구인지도 모른다. 개혁은 자기 결단을 필요로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조직의 개혁이다. 현재의 기업별 체제를 산업별 체제로 전환하는 일이 개혁을 위한 최대 과제다. 이는 현재 노동운동이 부딪쳐 있는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기업별 노조 형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조직의 급속한 축소가 예상되는 마당에 조직의 확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문제나 노동전선의 통일 그리고 현장조직의 활성화도 산별노조 전설운동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직형태 개혁이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투쟁의 개혁이다. 이것의 초점은 사회개혁 투쟁의 적극적인 실천에 맞춰져야 한다. 임금단체협약 투쟁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업장 차원의 경제투쟁으로는 현재의 중대 국면을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가권력과 총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개혁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것이다. 정책과 제도개선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향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 추구해야 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예비적 조직화'라는 중대 의미를 갖는다.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낮고 좁은 차원의 사회개혁 투쟁을 추진해 오긴 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회개혁 투쟁의 영역과 수준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회개혁 투쟁은 노동운동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추진이 노동운동 개혁을 위한 기본 과제이다. 노동정치의 지도 구심을 구축하지 않고서 국내의 독점자본과 보수정당 중심의 권력 체제에 대응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요구는 당위의 영역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다가와 있다. 민주노총은 조직의 결정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표방하고 15대 대통령 선거에 대처했고, 한국노총도 노동자 성당 건설을 정치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제 정치세력화 추진은 더 미룰 수 없는 현실의 요구가 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추진이 노동운동 개혁을 위한 큰 축의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추진될 노동운동 개혁에서 이념과 노선의 정립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 투쟁, 정치, 이념에 걸친 총노선의 새로운 획립이 필요하다. 이상의 과제 실천을 통한 노동운동의 개혁은 곧 한국자본주의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선략목표 실현을 위한 길을 여는 일이 될 것이다. ♦